



정치 &gt; 국회 · 정당

## [국감초점] 법사위, 법제처 코드인사·자문위원 명단 공개 등 논란

여야, 김형연 법제처장 답변 태도 두고 한때 고성 오가기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김민석 기자, 김진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10-04 18:43 송고



김형연 법제처장·오른쪽·이 : 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  
고 있다. 앞·부터·순서로는 윤세영기자

법제처를 대상으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법제처 코드인사'와 행정법제 혁신자문위원 명단 공개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 처장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가 오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 김 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여야의 설

전이 시작됐다.

장 의원은 "감사위원이 차장에게 질문했는데 질문을 받지도 않은 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자세인가"라며 "청와대 출신이라 오만방자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 그런 것인가. 이런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어떻게 국감을 하는가"라며 김 처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김 처장이 "국회 상임위 경험이 없어 관례를 잘 몰았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유감을 표하고 나서야 국감은 재개됐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제가 12년간 법사위를 해봤지만 이렇게 처장부터 국장까지 100% 고시 출신만 보임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인사의 다양성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제처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가니까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이 됐다. 동료 법관에게 죄책감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외관에서 비치는 것과는 달리 제 마음속에서는 법관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김 처장의 답변을 두고 "처장을 보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버랩 된다"며 "검찰개혁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루하루 버텨나간다는 조국 답변과 처장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행정법제 혁신자문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법제처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법제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신

